

호우피해 응급복구 및 폭염 취약계층 안전대책을 위한 긴급 재정 지원

- 집중호우 피해 경기·강원·경북 3개 시·도에 ‘재난특교세’ 16억 원 추가 지원
- 경북·대구 지역 호우 및 폭염 대응을 위한 ‘재난구호지원사업비’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강원·경북 등 3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이하 재난특교세) 총 16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호우피해 복구와 함께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경북 지역에 재난구호지원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호우로 경북 의성·안동과 경기, 강원 지역을 비롯한 각지에서 도로 유실과 토사 유출, 주택 침수 등이 발생했고 주민들이 일시 대피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피해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의성·안동 지역에서는 산불 피해지와 임시주거시설 등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재난특교세 지원은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산사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결정됐다.

이번에 지원되는 재난특교세는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토사·낙석 제거와 위험시설 긴급 안전조치 등 피해지역의 조속한 수습에 활용된다.

재난구호지원사업비는 최근 경북 경산·포항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는 등 전국적으로 폭염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무더위쉼터 냉방비 등 운영비와 취약계층 맞춤형 구호물품 구입을 지원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대전·세종·경기·충북·충남·경북 등 6개 시·도에도 재난특교세 21억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윤호중 장관은 “연이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용한 행정·재정적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산불 피해지역과 산사태 우려지역을 철저히 살피고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도 힘써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재난특교세)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송상훈 (044-205-5110)
		담당자	사무관	류해춘 (044-205-5125)
(재난구호)	재난복구국 재난구호과	책임자	과 장	정종율 (044-205-5330)
		담당자	사무관	송원필 (044-205-5334)

